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배우고 일할 권리

전일광장

이기언

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교육학박사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노동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는 장애인도 노동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은 보장받고 있는가?

얼마 전 비움박물관에서 진행된 ‘실개천 인문학 이야기마당’에 참여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글쓰기와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노들장애학궁리소 고병권 철학자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는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노들장애인야학에서 활동했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여러 이야기들 중 필자는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불리는 서울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은 화폐를 얻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일컫는다. 여기서 노동은 이윤이 발생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쉽게 말해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중 이윤이 발생하는 노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장애인의 노동은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노동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이 경제적 활동으로서 재화(돈)와 교환되는 수준에서만 인정가능하다고 한다면 여성들의 가사노동이나 가족 안에서의 돌봄은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었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노동의 가치를 다시 정의하도록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이 생산적으로 재화를 벌어들이는 것과 상관이 없더라도 그들이 간혀있지 않고 사회 밖으로 나와 활동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함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서울에서 260명의 일자리로 시작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2022년에는 서울·경기, 전남·북, 경남, 강원, 춘천 등의 지역에서 총 650여 개의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등 세 가지 직무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 받았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이 비장애인들에게는 이상한 몸짓과 소리로 보여지더라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로 인정받음으로써 이들이 꾸준히 사회로 나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이자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암묵적 약속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24년 서울의 260명의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다른 지역의 예산도 점차 축소될 것이라 예상된다.

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가치에 대한 관점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결과로 재화 획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교육의 가치를 투입 시간이나 비용 대비 성과(학업 성취도)로만 판단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간이 수단화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노동에 앞서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교육에서 효율성을 핑계로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장애학생은 늘어나는데 특수교사나 특수학급, 특수학교는 늘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이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비장애학생이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다행히 특수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통학버스를 타고 긴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독일 나치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가진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비장애인에게는 피상적인 인식 개선이 아닌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인식 개선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이 가능할 때 장애인이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7일(현지시각)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일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기독교인들이 낙타가 끄는 수레를 타고 크리스마스 축하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카라치=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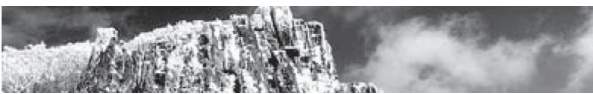
서석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무안군민 사이 벌어졌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김영록 지사의 로드맵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무안군민들간 1시간20분 간의 팽팽한 대치 상황이 단지 양 측의 입장차로 인한 결과일까.

지난 13일 무안 범대위(전투비행장무안이전반대범군민대책위)가 김영록 지사와 김산 군수가 참여할 예정이었던 도민과의 대화 행사장에서 시위를 시

작한 시각은 12시30분. 비슷한 시간 범대위는 김산 군수의 동선을 차단하기 위해 무안군정 1층을 점거해 반대 시위를 병행했다. 김산 군수, 무안군의회 의원 등이 시위대의 저지에 군청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행사장에는 무안을 지역구로 둔 전남도의원 두 명이 있었다. 범대위의 군공항 반대 시위 고조, 전남도의 행사 강행 입장 등 양측의 입장은 팽팽선을 달렸다. 급기야 양 측이 뒤엉키면서 충돌이 벌어졌지만, 광역의원의 역할은 부재했다. 경찰도 범대위에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군민들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뒷짐을 지고 행사장 안에서 이같은 상황을 지켜봤다. 이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대화와 타협, 소통과 설득



이다. 정치 역시 소통의 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군민들과 전남도와의 소통을 중재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으로 전남도에게 전달해야 할 도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는 두고두고 아쉽다. 이들은 결국 도민과의 대화 행사 시작 전,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일선 시·군의회-광역의회-국회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주민주권의 사다리의 완성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파행 사태로 되돌아보건대, 무안군의 정치력은 완전히 실종됐다. 시·군, 광역의회, 국회까지 나서서 단절의 정치

를 이어가고 있다. 더하지 못하고, 뺄셈을 지속하는 무안의 정치는 주민 고립과 분열을 유발하고 있다.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주말 회동’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면 광주민간공항을 2025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약문을 발표했다. 여기서의 ‘진전’은 무안군민들을 위한 설득을 말한다. 이번 골든타임을 넘기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벌써 올해는 갔고 2025년도 훌쩍 가까워지고 있다. 갑진년, 무안군의 정치력의 부활을 희망한다.

최황지 취재1부 기자

社說

‘지역 전공의 부족’ 정부·의협 공동노력을

조규홍 장관, 광주 의견청취

“수도권으로 자원이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해지고 필수의료 담당할 의사마저 지역과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18일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역대학·의료기관·전문가와

의견을 청취한 조 장관은 지방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지속 추진과 지역의사제도 대책 마련, 의과대학 확충, 대학 병원 역량 강화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를 늘리고 지방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방쪽 전공의를

확충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회협(의협)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추산 8000여 명이 참석했다. 다행히 주말집회라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피했다. 의협은 “(정부)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협의 발언에 “국민 건강 담보하는 총파업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이미 지방은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나온 지도 이미 오래됐다. 지역 의료계의 필수인력 확보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을 담보로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갈등을 보여선 안된다. 정부와 의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노력해 지역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다.

경제적 이유 절망하는 20대 이대론 안돼

부채비율 높고 결혼도 부정적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 20대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적 이유로 20대 여성의 70%가 ‘결혼은 안해도 된다’고 응답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젊은 층을 배려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총체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소득은 지난 2018년 4567만 원에서 2021년 5022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는 같은 기간 3363만원에서 3114만 원으로 7.4% 감소했다. 부채 보유액 증가율도 20대가 93.5%로 가장 높았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08년 20대 남녀 가운데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각각 71.9%, 52.9%였지만 2022년에는 20대 남녀가 각각 41.9%와 27.5%로 급감했다. 여성의 경우 10명 중 7명이 결혼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대 위협은 저출산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추락했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이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인구 급감 속도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중세 유럽을 능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전남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80% 이상이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2 미만으로 ‘고위험’에 속하는 곳만 10곳에 이른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에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도 현실화시켜야 한다. 지역소멸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30여 년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